고용노동부 | 보도자료 |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6.(금) 12:00 (2026. 11. 7.(토) 조간)

김영훈 장관, “성장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하는 일자리로”

- 고용동향점검회의에서 올해 노동시장 평가와 내년도 고용 전망 공유… 청년의 첫 취업 여건 집중 점검

- 관계부처 합동 ‘국민 일자리 프로젝트’ 준비… 내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25조 1,484억 원 편성

- 청년고용정책과 노동시장정책·고용서비스의 연계강화 검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1월 6일(금) 김영훈 장관 주재로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등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 평가, 2027년 고용 전망을 공유했다. 특히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얼마나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청년들이 첫 일자리를 구하고 경력을 쌓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2027년도 고용노동부 주요 일자리 예산안도 함께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라며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영훈 장관은 이어 “대통령께서 정부 역량을 집중하라고 주문하신 일자리·주거·서민금융 **3대 민생프로젝트**는 국민의 생활 기반을 튼튼히 하는 **국민주권정부의 또 다른 메가프로젝트**라고 생각한다”라며 “일자리 분야에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국민 일자리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민간과 공공에서 일자리 기회를 넓히고, 성장의 성과가 협력기업과 지역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2027년도 소관 예산안**으로 **38조 9,537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은 **25조 1,484억 원**으로, 올해보다 **6,294억 원(2.6%)** 늘었다. 청년이 첫 경력을 쌓을 기회를 넓히고, 산업전환에 필요한 역량을 국민 누구나 익힐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를 신설해 진로 탐색부터 일경험, 직업훈련, 취업까지 청년의 상황에 맞춰 지원하고, **기업 현장에서 실무를 경험할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과 첨단산업 분야의 직업훈련도 확대**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역량을 익히고 실제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급격한 산업전환의 충격이 취약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고용안전망도 강화**한다.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호를 보강**하고, **장애인과 중장년의 취업·재취업 지원,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경력 유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청년고용정책관실의 기능을 노동시장정책 및 고용서비스와 더욱 긴밀하게 연계**하는 방향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업종별 채용과 직무 변화를 청년고용정책에 신속히 반영하고, 청년이 고용서비스를 통해 상담부터 일경험·훈련, 취업 지원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이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김영훈 장관은 “청년에게는 첫 경력을, 중장년에게는 산업전환에 대비하여 경력을 이어 나갈 수 있게 하는 직업훈련을, 노동시장 취약계층에게는 든든한 사회안전매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을 준비하겠다”라며, “다음 주 국회 예산안 심의에서 현장에 필요한 지원과 정부안의 취지를 충실히 설명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고용동향 점검회의 개요 1부.
2. 장관 모두 발언 1부. 끝.

담당 부서	고용지원정책관 미래고용분석과	책임자	과 장	조원식 (044-202-7260)
		담당자	사무관	김종인 (044-202-7233)
		담당자	주무관	박수아 (044-202-732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1 **고용동향 점검회의 개요**

□ 일시·장소

○ (일시) 2026. 11. 6.(금) 10:30 ~ 11:30

○ (장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장관실 회의실(9층)

□ 참 석

○ (**노동부**) 장관, 고용정책실장, 고용정책실 관련 국·과장 13명

○ (**전문가**) 한국노동연구원·한국직업능력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은행 전문가 11명

□ 주 제

○ 최근 거시경제 동향 및 전망(KDI)

○ ’26년 노동시장 평가와 ’27년 전망(노동연)

○ 청년 노동시장 상황분석(노동연, 직능연, 한은)

○ ’27년 고용노동부 주요 일자리 예산(노동부)

붙임 2 **장관 모두 발언**

반갑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함께해 주신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장님,
고혜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님,
그리고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최근 경제 흐름과 올해 노동시장을 함께 살펴보고,
내년도 고용 여건과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9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1만 3천 명 늘었습니다.
그러나 건설업과 임시·일용직의 고용 여건에는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고, 청년 고용률은 44.0퍼센트에 머물렀습니다.
수출과 투자의 성과가 협력기업과 지역의 채용으로 이어지고,
청년에게 첫 일자리의 기회가 열려야
국민께서 경기 회복을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 고용은 한층 세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청년 인구가 줄어든 영향과 실제 취업 여건의 변화를 구분하고,
업종별 채용 상황과 경력직 중심 채용, 인공지능에 따른 직무 변화가
첫 취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구직을 쉬고 있는 청년이 다시 일자리를 찾기까지
어디에서 어려움을 겪는지도 짚어야 합니다.
오늘 전문가 여러분께서 내년도 고용 전망과 함께
지원을 서둘러야 할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달 대통령께서는 성장의 성과가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일자리, 주거, 서민금융의 3대 민생프로젝트에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일자리를 얻고, 안정적으로 살 곳을 마련하고,
어려울 때 필요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국민이 내일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세 가지 민생프로젝트가
국민주권정부의 또 다른 메가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국제노동기구의 필라델피아 선언은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라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 원칙은 일하는 방식이 달라져도 모든 일하는 사람이
기본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뜻으로 이어집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간과 공공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담은
‘국민 일자리 프로젝트’ 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장의 성과가 협력기업과 지역의 일자리로 이어지고,
산업이 바뀌는 과정에서도
일하는 분들이 필요한 보호와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진짜 성장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도 이 방향을 담았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은 38조 9,537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는 올해보다 6,294억 원,
2.6퍼센트 늘어난 25조 1,48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청년에게는 첫 경력을, 중장년에게는 산업전환에 대비하여
경력을 이어 나갈 수 있게 하는 직업훈련을,
노동시장 취약계층에게는 든든한 사회안전매트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청년에게는 첫 취업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일터에 자리 잡기까지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 신설에 3,793억 원을 담아
청년 16만 명에게 진로 상담과 일경험,
직업훈련을 연계할 계획입니다.

기업 현장에서 실무를 경험할 기회를 넓히고,
구직을 쉬고 있는 청년의 재도전과
취업한 청년의 근속도 지원하겠습니다.

직업훈련은 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역량을 익히고,
배운 것을 일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K-디지털트레이닝에 6,089억 원을 반영하고,
이 가운데 인공지능 훈련 규모를
1만 명에서 2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재직자도 직무 변화에 필요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공동훈련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산업전환의 부담이 대응 여력이 부족한 분들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고용안전망도 보강하겠습니다.
노무제공자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중장년의 재취업과 장애인의 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출산·육아기 근로자가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도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고용정책관실의 기능을 노동시장정책 및 고용서비스와
더 긴밀하게 연계하는 방향으로 일하는 체계도 살펴보겠습니다.

업종별 채용과 직무 변화를 청년고용정책에 신속하게 반영하고,
청년이 상담을 받은 뒤 필요한 일경험과 훈련, 취업 지원까지
이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의가 시작됩니다.
현장에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정부안에 담은 사업이 국민의 일과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충실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진단과 제안도
내년도 고용정책과 국민 일자리 프로젝트에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